

2013 국가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3.6.22 시행)

〈출제명〉

이번 국가직 7급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했으나 변별력이 문제될 정도로 일부 문제는 매우 지역적이고 대부분의 문제는 너무 평이했다. 정보화 관련 문제,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국회 결산 심의과정에 관한 문제(문6, 문7, 문18)가 약간 까다로웠고 나머지 문제는 평이한 수준의 출제였으며 기본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 때 강조하였던 문제들(수직적 연결기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광역행정 방식 등)이 대부분 출제되었다. 국가직 시험 입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문항이나 출제되었으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쟁조정이나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 김 중 규 -

01.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규모의 경제
- ② 정보의 비대칭성
- ③ X-비효율성
- ④ 외부효과와 발생

[답] ③ ③은 정부실패 요인이다.

●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원인

시장실패의 원인	정부실패의 원인
· 공공재의 존재	· 내부성(사적 목표)
· 외부효과(외부성)	· 파생적 외부효과
· 자연독점, 불완전경쟁	· 비용과 수익의 절연
· 수익의 증가와 비용 감소 (과도한 규모의 경제)	· X-비효율
· 정보의 편재 - 대리인문제	· 경쟁의 결여(독점성)
· 소득분배의 불공평	· 권력의 편재에 의한 분배의 불공평

☞ 2013 7급 p.73

02. 정책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 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 ② 그린벨트 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 ③ 계층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 ④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답] ① 설문은 배분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적재원으로 추진하는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는 규제정책, ③은 재분배정책, ④는 추출(동원)정책

● Lowi의 정책유형

구분	개념	예	특징
구성정책	행정체제 정비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역 획정	게임의 법칙
배분정책	서비스 배분	SOC, 보조금 등	포크베럴, 로그롤링
규제정책	제약과 통제	진입규제, 독과점규제	다원주의(포획과 지대추구)
재분배정책	부의 이전	사회보장정책, 계급이전정책	엘리트이론

☞ 2013 7급 p.278

03. 정책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②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③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④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답] ④ 선례가 있는 정형화된 문제들은 의제 채택 가능성이 높고 선례가 없는 문제들은 의제 채택 가능성이 낮다.

☞ 2013 7급 p.291

04. 킹던(J.W.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Policy Window Theory)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이 아닌 것은?

- ① 정보의 흐름(information stream)
- ②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 ③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 ④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답] ①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적 흐름이다.

● 쓰레기통 모형과 흐름창 모형의 요소

쓰레기통 모형의 요소	흐름창(정책창) 모형의 요소
① 문제의 흐름	① 문제의 흐름
② 해결책의 흐름	② 정책의 흐름
③ 선택기회의 흐름	③ 정치의 흐름
④ 참여자의 흐름	

☞ 2013 7급 p.370

05.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② 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③ 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④ 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답] ③ ③만 옳다. 위원회를 성격과 기능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위원회의 종류

자문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청년위, 민주평통자문회의
조정위원회	국무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행정위원회	소청심사위, 금융위, 국민권익위
독립규제위	중앙선거관리위, 중앙노동위, 공정거래위

- ① 독립규제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② 독립규제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④ 조정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 2013 7급 p.600

06.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에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③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④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답] ② 해임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된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우 1/8,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4을 감액지급한다.

● 퇴직급여 지급제한

해임	원칙적으로 제한 없으나 금품 수수 및 공금횡령시 지급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1/8 감액
파면	재직기간 5년 이상	1/4 감액
	재직기간 5년 미만	1/4 감액
파면	재직기간 5년 미만	1/4 감액
	재직기간 5년 이상	1/2 감액

☞ 2013 7급 p.813

07.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답] ④ ④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권한이다.(국회법 제84조 제6항) ③의 경우 국회는 위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 직접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정부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국회법 제84조 제2항)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을 함께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국회법 84조③항)
-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84조②항)
- ④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4조⑥항)

☞ 2013 7급 p.1013

08.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과학적 관리론
- ㄴ. 종신고용 보장
-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 ㄹ. 실적주의(merit system)의 요구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답] ③ 직위분류제는 ㄱ. 과학적 관리론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ㄹ. 실적주의(merit system)의 요구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

☞ 2013 7급 p.744

09.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 시·도 또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 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 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 를 구성할 수 있다.

㉠ ㉡ ㉢ ㉣

①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장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협의체
② 지방자치단체 조합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협의체
③ 행정협의회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장협의회
④ 지방자치단체 조합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 위원회	행정협의회

[답] ④ ㉠은 조합, ㉡은 협의체, ㉢은 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은 행정협의회에 각각 해당한다. 모두 우리나라 광역행정 방식의 일종이다.

☞ 2013 7급 p.1111

10.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 ㄱ.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 ㄴ.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ㄷ.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 ㄹ.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답] ④ ㄱ은 지방소비세로 보통세, ㄴ은 지역자원시설세로 목적세, ㄷ은 지방소득세로 보통세, ㄹ은 지방교육세로 목적세이다. 따라서 ㄴ, ㄹ만 목적세이다.

● 지방세목 체계

	도세	사군세	특별사광역시세	자치구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락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자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11. 조직관계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 ① 계층제
 ② 규칙과 계획
 ③ 수직정보시스템
 ④ 임시작업단(task force)

[답] ④ ④는 수평적 연결조정기제에 해당한다.

●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조정기제 (Daft)

수직적 연결기제	수평적 연결기제
① 계층제	① 정보시스템
② 규칙과 계획	② 직접접촉
③ 계층직위의 추가	③ 임시작업단
④ 수직정보시스템	④ 프로젝트 매니저
	⑤ 프로젝트 팀

12.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실제 행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ㄴ.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 기준의 확인
 ㄷ. 통제주체의 시정조치
 ㄹ.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ㄴ → ㄱ → ㄹ

[답] ②가 옳다.

13.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② 직무 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③ 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④ 직무 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답]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은 높고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은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수직적·수평적 전문화와 직무의 효과성간의 관계

구분	수평적 전문화 ¹⁾	
	높음	낮음
수직적 전문화 ²⁾	높음	생산부서의 비숙련직무
	낮음	특수전문가적 직무
		일선관리업무
		전략적 결정

- 1) 수평적 전문화(수평적 분업) : 과업범위의 세분화 정도로서 한 사람이 한가지의 일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정도 ⇨ 직무확대와 반대개념
 2) 수직적 전문화(수직적 분업) : 과업수행방법이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도 (하급자가 권한과 책임 없이 상급자가 결정한 방법대로 과업을 반복하는 경우는 수직적 분업화가 높은 경우이다.) ⇨ 직무충실과 반대개념

14.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② 부하의 변화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③ 부하의 자기 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④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

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답] ① ①은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비교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변화관	안정 지향, 폐쇄적	변화 지향, 개방체제적
초점	하급관리자	최고관리층
관리전략	리더와 부하간의 보상 및 교환관계나 통제	영감과 비전의 제시공유에 의한 동기유발
이념	능률지향	적응지향
조직구조	기술구조(기술위주)	경계작용적 구조(환경과 연계작용)
관련 조직	기계적 관료제, 합리적 구조에 적합	단순구조나 임시조직 등 탈관료적·유기적 구조에 적합

● 변혁적 리더십에 적합한 조직 조건

- (1) 적응성의 강조 : 변혁적 리더십은 능률지향보다는 적응지향이 더 강조되는 조직에 적합하다. 그리고 창의적 모험을 지지하는 조직문화에 적합하다.
- (2) 경계작용적 구조의 중시 : 변혁적 리더십은 기술구조보다 경계작용적 구조(boundary-spanning units)가 더 지배적인 조직에 적합하다. 여기서 기술구조란 기술을 운용하여 투입을 처리하는 부서이다. 경계작용적 구조는 조직과 그 환경의 연계작용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다.
- (3) 단순구조·임시체제의 특성 : 변혁적 리더십은 기계적 관료제·전문적 관료제·합리적 구조보다는 단순구조와 임시체제에 더 적합하다.
- (4) 통합형 관리전략 : 변혁적 리더십은 시장적 교환관계나 관료적 통제보다는 개인적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통합시키는 관리전략에 의해 공동목표성취를 위한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려는 조직에 더 적합

☞ 2013 7급 p.529

15.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 ②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 ③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답] ④ 케이든(G.E.Caiden)이 말하는 이른바 제도적 부패는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조직의 본래적 임무 수행을 위한 공식적 행동 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한 상황을 가리킨다. 부패가 제도화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패한 구성원이 조직의 응호를 받는 반면에 공식적 행동규범을 고수하려는 구성원들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제도적 부패의 상황적 조건

조직은 내부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공식적 행동 규범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나, 이러한 공식적 행동 규범의 위반을 조장, 방조,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식적 행동 규범을 고수하는 구성원이 제재를 받는 반면에, 공식적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부패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 부패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폭로하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보복을 당하며, 부패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갖가지 위협을 가하여 침묵시킨다(강성철외, 새인사행정론).

● 부패의 유형

거래형 부패	뇌물을 받고 특혜를 부여하는 부패 (상대가 있는 외부부패)
사기형 부패	공공회령, 회계부정 등 (상대가 없는 내부부패)
일탈형 부패	돈받고 단속 눈감아 주기 (개인적 부패)
제도화된 부패	급행로나 커미션이 당연시되는 부패문화화, 관행화된 체제적 부패, 집단부패
권력형 부패	정치인이나 상층부 관리들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막대한 부패
생계형 부패	하급관리(민원부서 공무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저지르는 작은 부패 (lily corruption)
백색부패	선외의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외환위기는 오지 않는다)
흑색부패	악의가 있고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 가능한 부패)
회색부패	사회에 해를 끼칠 잠재력을 가진 부패로서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윤리강령에 규정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패)

☞ 2013 7급 p. 846

1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 ① 5급 일반직 공무원
- ②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 직렬공무원
- ③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답] ② ②만 가입대상이다.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이 가입대상이며 ④의 경우 현업관서 기능직노조에 가입되어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된다.

●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

법적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991)
구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별로 하나의 협의회 설립 가능 (전국단위 결성은 금지)
가입범위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기능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중 10년 경력미만의 외무직공무원 ·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 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는 체신 등 현업직공무원이나, 지휘감독직 공무원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국정원 등)보안경비업무종사자,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 사항 · 기타 당해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 협의회는 노조가 아니므로 보수 등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협의 불가

☞ 2013 7급 p.833

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답] ③ 자치사무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 중앙통제의 유형

행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
통제	국가사무처리의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경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집행 등을 해태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유한 사항에 한한다.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요구 지시와 제소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무부장이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의 필요적(필수적) 감사대상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각종 유권해석 및 자치 의 제청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위임사무 등의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치를 제청한다.
인사상 정원상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중앙인건비에 의한 통제 안전행정부장관은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감독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사도의 부지사) 등을 둘 수 있으며 5급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6급이하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예산 및 결산 보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및 결산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치단체 재정운영업무 편입 시범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재정운영의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자치단체 재정운영업무편입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자치재 발행기재의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부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재 발행할 수 있다.
보조금 사용에 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과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성·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작성·운영하는 중장기 재정운영지침서로 기공과 예산을 연계시키고 중장기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필요에 따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
지방재정진단제도	안전행정부장관은 사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도구에 대하여 각각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권고 및 지도 등을 실시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에 대한 시·도적 평가제도이다.
재정투융자심사제도	일정규모(상 300억)의 신규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인행부가 그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에 사전에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2013 7급 p.1197

18. 「국가정보화기본법」 상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가 아닌 것은?

- ①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②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 ④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답] ③ ③은 정보화 책임관의 담당업무가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소관이다. ④의 경우 정부전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수립하지만 각 부처 아키텍처는 정보화 책임관이 도입·활용한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총괄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건전한 정보통신문리의 확립
 -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 정보화 교육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 2013 7급 p.1137

19.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방식이다.
- ③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미래 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답]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이지만 어디까지나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top-down)방식이다.

● 자율편성예산제도의 효과과 단점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략적 자원배분과 각 부처 자율을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② 분야별·부처별 자원배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되고 예산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③ 각 부처에서는 예산을 과다요구하고 중앙예산기관에서는 이를 대폭 삭감하는 관행(악순환) 제거 ④ 지출한도를 통합하여 정해하므로 각 부처가 특별회계, 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고 애쓰게 하는 유인(편법)을 줄여준다 ⑤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대응 및 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2) 한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② 각 부처의 이기적·방어적 정보제공이 국무회의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③ 자원배분의 부처 자율은 예산통제의 어려움을 수반한다. ④ 자율적인 예산편성제도일뿐 예산집행상 점검이나 통제가 불필요해진 것은 아니다. |
|--|

☞ 2013 7급 p.977

20. 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정리하는 방법이다.
-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 ③ 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다음,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답]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은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 집단 의사결정방법

브레인스토밍	대면적 접촉 하에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집단자유토의기법 (두뇌폭풍기법), 비판 금지, 질보다 양 중시
전통적 델파이	익명의 격리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종합·정리하는 설문조사 기법, 대면적 토의 없음

정책델파이	델파이를 정책분석에 응용(다양한 참여자, 선택적 익명성, 갈등의 조성, 양극화된 통계처리 등이 전통적 델파이와 차이)
교차영향분석	연관된 사건의 발생여부에 기초하여 미래 특정사건의 발생확률 추정
실현가능성분석	정치적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대안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분석
역사적 유추	과거의 유사한 문제 등과의 유추(시네틱스)에 의한 예측
명목집단기법	대안제시 → 제한된 집단토론 → 표결 (컴퓨터 표결시 전자적 회의기법이 됨)
변증법적 토론	찬·반 두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여 대안의 장단점을 도출하는 지명반론자기법, 악마의 주장법

☞ 2013 7급 p.339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봐야 할 문풀필독서

9급
예상문제 2013 행정학 기출



6.12 대출간

· 건범위 동원모의고사 23회분, 170여쪽
· 2013 각종 9급시험 대비

대한민국 선택과목 중 가장 빠르고 쉬운 ... 그러나 가장 알찬 행정학

행정학개론 **대혁명**
- 2014 대비 기본이론 강의 -

- 절찬리 판매중 -
김공규 **행정학**

얕음에 놀라지 마라 알침에 놀라라

KOSPA | 02)532-5280~1
www.kospa.co.kr

2013 국회8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3.7.06 시행)

01. 행정가치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라고 파악하며,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ㄴ. 롤스(Rawls)의 사회정의의 원리에 의하면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이며, 제2원리는 차등조정 원리이다.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차등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ㄷ.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하며, 공익과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ㄹ. 베를린(Berlin)은 자유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하였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답] ① 모두 틀리다.

- ㄱ.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
 ㄴ. 롤스(Rawls)의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차등원리보다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ㄷ.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
 ㄹ.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자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적극적 자유

02.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인 여유자금 10억 원을 금융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대안으로는 예금, 채권, 주식이 있다. 각 금융상품은 미래 경기상황(경기호황, 경기보통, 경기침체)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상이한 기대수익을 발생시킨다. 만약 경기상황을 예측하기 힘들다면 의사결정자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의사결정자가 기대수익이 높은 자산에 투자한다고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위 : 억 원)

투자대안 \ 경기상황	호황	보통	침체
예금	2	2	2
채권	3	2.5	1
주식	6	3	-2

예) 경기호황 시 예금의 기회손실은 4억원(6-2=4)이다.

- ① 의사결정자가 향후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각 대안 중에서 예금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② 의사결정자가 향후 경기가 호황일 것이라고 예상

한다면, 각 대안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 ③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들의 최대기회손실이 최소인 대안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각 대안 중에서 채권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④ 각각의 경기 상황 발생확률이 1/3이라고 한다면 각 대안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⑤ 의사결정자의 경기호황에 대한 기대성향이 0.3이고 경기보통에 대한 기대성향이 0.5, 경기침체에 대한 기대성향이 0.2라면, 각 대안 중에서 예금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답] ⑤ 의사결정자의 경기에 대한 기대성향이 각각 0.3, 0.5, 0.2이므로 이러한 각 확률을 투자대안의 경기 상황에 대한 기대수익에 곱해 나온 기댓값이 가장 높은 투자대안에 투자할 것이다. 따라서 예금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 예금의 기대수익 : $0.3 \times 2 + 0.5 \times 2 + 0.2 \times 2 = 2$
- 채권의 기대수익 : $0.3 \times 3 + 0.5 \times 2.5 + 0.2 \times 1 = 2.35$
- 주식의 기대수익 : $0.3 \times 6 + 0.5 \times 3 + 0.2 \times (-2) = 2.9$

- ㉠ 경기침체 시 예금의 기대수익이 2로 채권과 주식의 기대수익보다 높다.
 ㉡ 경기가 호황이라면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투자대안인 주식에 투자할 것이다.
 ㉢ 최대 기회손실(최대 후회값)이 최소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기준 중에서 새비지 기준으로 새비지 기준에 따르면 최대 후회값이 가장 낮은 투자대안인 채권에 투자할 것이다. 새비지 기준은 최대기회비용이 최소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투자대안 별 기회손실>

투자대안 \ 경기상황	호황	보통	침체	최대 후회값
예금	4(6-2)	1(3-2)	0(2-2)	4
채권	3(6-3)	0.5(3-2.5)	1(2-1)	3
주식	0(6-6)	0(3-3)	4(2-(-2))	4

- ④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라플라스 기준을 의미한다. 각 경기상황별 발생확률이 1/3이므로 라플라스 기준에 따르면 투자대안의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주식에 투자할 것이다.
 • 예금의 기대수익 : $(2+2+2)/3=6/3$
 • 채권의 기대수익 : $(3+2.5+1)/3=6.5/3$
 • 주식의 기대수익 : $(6+3-2)/3=7/3$

03. 다음 중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의제설정은 다양한 사회문제 중 특정한 문제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해결되기 위해 하나의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다.
 ② 정책의제는 어떤 사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정부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단계에 이른 문제를 의미한다.
 ③ 공중의제는 일반공중이 실제로 정책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표명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말한다.
 ④ 정책의제설정은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등의 유형이 있다.
 ⑤ 정책의제설정 과정에는 주도집단, 정책체제, 환경 등의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답] ② ②는 정책의제가 아니라 체제의제에 대한 설명이다. 체제의제란 정부에 의한 정책적 해결의 필요성이 높아진 문제, 즉 일반국민들이 정부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생각하게 된 문제를 말한다. 이러한 체제의제가 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면 제도외제(정부외제)가 된다. 콕과 엘더는 정책의제를 체제의제와 정부의제로 나누었다.

04. 다음 중 강화일정(schedules of reinforce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속적 강화는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② 고정간격 강화는 부하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③ 변동간격 강화는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변동적인 간격으로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④ 고정비율 강화는 성과급제와 같이 행동의 일정비율에 의해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⑤ 변동비율 강화는 불규칙한 횟수의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답] ② 고정간격 강화는 부하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와 관계없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강화 일정

강화일정		의미
연속적 강화		성과(바람직한 행동)가 나올 때마다 강화
단속적 강화	간격 강화	고정간격강화 비밀직하한 행동에 관계없이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강화(매월 말 주는 보수)
	비율 강화	고정비율강화 일정한 빈도나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매출 백만대마다 성과급 얼마)
	간격 강화	변동간격강화 불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강화
	비율 강화	변동비율강화 불규칙적인 빈도나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특별보너스)

05. 다음 중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자본은 사회 내 신뢰강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 ②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비해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 ③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규범 또는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력을 제공한다.
- ④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conformity)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킨다.
- ⑤ 사회적 자본은 집단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답] ④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을 요구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단면이다.

06. 행정통제체제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일반계서(ordinary hierarchies)는 행정체제 내의 일차적 통제구조에 해당하며 의사결정계층의 연쇄로 구성된다.
- ㄴ. 감사원은 전형적인 외부적 독립통제기관이다.
- ㄷ. 옴부즈만은 그가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권한을 함께 갖는 것이 원칙이다.
- ㄹ. 외부적 통제체제에는 국회, 헌법재판소, 교차기능조직, 국민 등이 포함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답] ④ ㄱ만 옳다.

- ㄴ. 감사원은 내부적 독립통제기관이다.
- ㄷ. 옴부즈만은 그가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ㄹ. 국회, 헌법재판소, 국민 등은 외부통제기관이지만 교차기능조직은 계산부처를 수평적으로 지원 또는 조정하는 정부막료부처로서 내부통제기관이다.

07. 다음 중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균형성과표는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의 균형을 강조한다.
- ② 균형성과표를 정부부문에 적용시키는 경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무적 관점보다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③ 균형성과표를 조직에 적용시키는 경우 4대 관점뿐만 아니라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5대 관점이나 6대 관점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균형성과표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 ⑤ 균형성과표는 과정과 결과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간의 인과성을 바탕으로 통합적 균형을 추구한다.

[답] ② 균형성과표를 공공부문에 적용시킬 경우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변화는 재무적 관점보다 정부기관의 임무 달성과 직결되는 고객관점이 가장 중시된다는 점이다. ③의 경우 4대 관점에다가 인적 자원을 추가하는 관점도 있고, 종업원 만족 및 환경/커뮤니티관점을 추가하는 관점도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BSC(균형성과관리)

- 재무적 관점 - 민간부문에서 중시
- 고객 관점 - 정부부문에서 중시
- 프로세스(절차) 관점
- 학습과 성장 관점

08. 조직이론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과학적 관리론은 운동이라기보다 하나의 이론으로 출발하였다.
- ㄴ. 테일러(Taylor)는 과학적 조사, 연구, 실험 등을 통해 관리업무의 능률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 ㄷ. 베버(Weber)는 조직을 사회관계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하였으며 조직운영에 필요한 명령을 구성원들이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권위의 계층제를 주장했다.
- ㄹ. 메이요(Mayo)의 호손실험은 과학적관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 ㅁ. 아지리스(Argyris)는 조직이 개인의 심리적 성공 경험을 중시하여 인간의 자아가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답] ② ㄱ, ㄹ, ㅁ은 틀리고 ㄴ, ㄷ만 옳다.

- ㄱ. 과학적 관리론은 이론이라기보다 하나의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 ㄹ. E.Mayo의 호손실험은 인간관계론을 뒷받침하였다.
- ㅁ. 아지리스(Argyris)는 조직이 개인의 심리적 성공 경험을 무시하여 인간의 자아가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조직과 개인 간에 갈등이 악순환된다고 주장하였다.

기대치의 정도가 동기부여의 주요한 요인이다.

[답] ⑤ 성과와 보상에 대한 인식은 기대치가 아니라 수단성이다.

● V.Vroom의 동기기대이론 (VIE이론)

- (1) 기대감(E) - 노력·능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
- (2) 수단성(I) - 성과(1차산출)가 바람직한 보상(2차산출·결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정도
- (3) 유의성(V) - 보상(2차산출이나 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

14. 매트릭스구조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물리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 구조이다.
 ㄴ.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의 필요가 증대되면서 등장하였다.
 ㄷ. 기능부서 통제권한의 계층은 수평적으로 흐르고, 사업부서간 조정권한의 계층은 수직적으로 흐르게 된다.
 ㄹ. 일원적 권한 체계를 갖는 데 그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답] ④ ㄴ만 옳다.

- ㄱ.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이다.
- ㄷ. 기능부서의 권한은 수직적으로 흐르고, 사업구조의 권한은 수평적으로 흐른다.
- ㄹ. 수평적·수직적인 이원적 권한 체계가 매트릭스구조의 특징이다.

15. 다음 중 자본예산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예산제도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분석과 예산사정을 가능하게 한다.
- ② 자본예산제도에 수반되는 장기적인 공공사업계획은 조직적인 자원의 개발 및 보존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③ 계획과 예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이들 간에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한다.
- ④ 경제적 불황기 내지 공황기에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유효수요와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불황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상황의 변동과 사회간접자본의 축적·유지의 추이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답] ③ ③은 자본예산의 아니라 계획예산(PPBS)의 특징 내지는 장점이다.

16. 다음 중 전자정부 2.0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비스의 지능화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서비스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람 중심으로 모든 사람의 참여와 공유를 강조한다.
- ④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대등하거나 심지어는 국민 중심으로 이동시키려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 ⑤ 누구나 가치 있는 정보나 새로운 서비스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유한 정보를 개방한다.

[답] ① 서비스의 지능화를 통하여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3.0전자정부에 해당한다. 2.0전자정부는 우선모바일 중심의 전자정부로서 양방향 정보제공을 중시하는 시민중심의 전자정부를 말한다. 전자정부는 1.0, 2.0, 3.0으로 전개되었다.

● 전자정부의 변천

	1995년~2000년	2005년~2010년	2015년~2020년
구분	Government 1.0	Government 2.0	Government 3.0 (u-Government)
	world wide web	web 2.0	web 3.0(real world web)
접근성	정부 중심	시민 중심	개인 중심
	first stop shop (단일 접속창구)	one stop shop (정부서비스 중개 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my Government
서비스	일방향 정보제공 제한적 정보제공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공급 위주 서비스 서비스의 전자화	양방향 정보제공 정보 공개 확대 모바일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정보제공 실시간 정보공개 중단 없는 서비스 서비스의 지능화

17. 다음 중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대해 최소한 2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답] ③ ③만 옳다.

- ① 3년
- ② 2/3이상
- ④ 국무총리의 재평가는 임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즉,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
- ⑤ 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안전행정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다.

18.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반영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하였다.

- ② 크랜츠(Kranz)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로 까지 확대하여 관료제 내의 출신 집단별 구성 비율이 총인구 구성 비율과 일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 분야와 계급의 구성 비율까지도 총인구 비율에 상응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대표관료제의 장점은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징을 반영하는 소극적 측면의 확보를 통해서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나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는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다.

[답] ③ 대표관료제의 소극적 측면이 적극적 측면으로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19.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는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사회적 제도인 일단의 규칙에 달려있다.
- ② 행정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행정 업무 수행에서 효율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 ③ 정부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함으로써 기업경영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 ④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 해결을 넘어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 ⑤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직 내 관계보다 조직간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답] ③ ③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다.

- ① 신제도론
- ② 신공공서비스
- ④ 거버넌스
- ⑤ 조직간 관계보다 조직내 문제 중시

20. 다음 중 광역행정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 ② 연합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합단체를 새로 창설하여 광역행정에 관한 사무를 그 연합단체가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 ③ 연합방식은 새로 창설된 연합단체가 기존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처리방식과 구별된다.
- ④ 통합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로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 ⑤ 통합방식은 각 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지방 분권화를 촉진하고 주민참여를 용

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 발전도상국보다 선진 민주국가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답] ⑤ 통합방식은 기존의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수성이 무시된 채 주민참여를 저해하고 중앙집권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선진국보다 발전도상국에서 많이 사용한다.

● 광역행정 방식

공동처리	사무위탁	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
	행정협의회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 업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 법인격이 없고 구속력(강제력) 없음
연합	일부 사무조합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규약(계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체(법인격이 있으며 특별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짐)
	단체연합체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단체인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방식
통합	도시공동체	기초자치단체인 시(市)들이 광역행정단위를 구성하는 방식
	복합사무조합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몇 개의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체
통합	합병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통폐합시켜 광역단위의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 창설(통폐합)
	흡수통합	하급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지위를 상급자치단체가 흡수하는 방식
	전부 사무조합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모든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인체(= 사실상 합병)

21. 다음 중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별 문제의 진단 기준과 해결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전근대적인 권위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계층제를 제안한다.
- ②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기준은 내부규제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관리 재량권 확대를 제안한다.
- ③ 시장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공급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안한다.
- ④ 참여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관료적 계층제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안한다.
- ⑤ 신축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영속성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안한다.

[답] ④ 참여정부모형은 가상구조가 아니라 탈계층제조직인 평면구조이다.

● Peters의 거버넌스모형

	시장정부모형	참여정부모형	신축적정부모형	탈내부규제모형
문제	독점성	계층제	영속성	내부규제
조직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
관리	성과급, 민간기법	TQM, 팀제	가변적 인사	재량권 확대

● 신공공관리론 vs (뉴)거버넌스

구분	신공공관리(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	신자유주의 · 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 · 참여주의
관리기구(공급주체)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정치성)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자민봉사주의	시민주의(Civicism)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22.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②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 ③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 ④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 ⑤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답] ① 경찰공무원은 치안감 이상이 공개대상이지만, 소방직은 소방감이 아니라 소방정감 이상이 공개대상이다.

●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 공직자

	등록대상자	공개대상자
정무직	① 대통령 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②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의 정무직	① 좌동 ② 좌동
일반직 별정직	③ 4급 이상 일반직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 포함)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③ 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임무직 등	④ 외무공무원(6등급 이상)과 4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	④ 외무공무원(12등급 이상)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법관 검사	⑤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군인 등	⑥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 군무원	⑥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교육직	⑦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교육장 및 교육위원	⑦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경찰 소방	⑧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직	⑧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및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세무직	⑨ 4급 이상	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세관장
기타	⑩ 세무, 감사, 검찰사무, 건축·토목, 환경·식품위생분야의 대인업무 등에 종사하는 7급 이상 5급 이하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⑩ 정부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의 가등급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계약직)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23. 다음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와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0일까지 위 법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장은 매년 해당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서 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매년 9월 30

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르면 9,30이 아니라 10,31이다.

24. 다음 중 연구조사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타당성(valid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준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도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 ②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연구에서 이용된 이론적 구성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 수단 간에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③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측정지표간의 일관성이다.
- ④ 수렴적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 ⑤ 차별적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측정지표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

[답] ③ ③은 내용타당도가 아니라 측정의 신뢰도와 연관된다.

● 타당도 유형

구분	개념	판단기준	검증방법
기준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실적' 예측여부	'시험성적 = 근무성적'	예측적 검증 (합격자) 동시적 검증 (재직자)
내용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 측정 여부	'능력요소 = 시험내용'	내용분석
구성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관련된다 고 믿는 '이론적 구성요소' 측정 여부	'이론적 구성요소 = 시험내용' 부합여부	논리적 추론 · 수렴적 타당성 ¹⁾ · 차별적 타당성 ²⁾

- 1) 수렴적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 2) 차별적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측정지표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

25. 다음 중 정책결정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사례 분석인 엘리스(Allison)모형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은 합리모형 보다는 조직과정모형과 정치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② 드로(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해 현실성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 ③ 쓰레기통모형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 ④ 에치오니(Etzioni)의 혼합탐사모형에 의하면 결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모형과 점진적 의사결정모형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에 의하면 정책담당자들은 경제인과 달리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재정적 측면에서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 [답] ① Allison은 의사결정의 세 가지 모형이 정-반합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정책에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쿠바해상봉쇄정책도 모형1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모형2 또는 모형3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한겨레 10명 중 9명이 추천하는 강의 - 대한민국 행정학 No.1 김중규 행정학

Q1: 왜 '지식'을 배우는가?
Q2: 왜 '지식'을 배우는가?
Q3: 왜 '지식'을 배우는가?
Q4: 왜 '지식'을 배우는가?
Q5: 왜 '지식'을 배우는가?
Q6: 왜 '지식'을 배우는가?
Q7: 왜 '지식'을 배우는가?
Q8: 왜 '지식'을 배우는가?
Q9: 왜 '지식'을 배우는가?
Q10: 왜 '지식'을 배우는가?

행정학 대혁명

C1 일정

- 1교: 2014년 9월 10일(수) 09:00~13:00
- 2교: 2014년 9월 11일(목) 09:00~13:00

C2 교재

- 2014년 행정학 (9/7급 공책) · 2시간 (총 600쪽)
- 2014년 행정학 (7급) · 2시간 (총 600쪽)

C3 특징

- 수험생의 고민과 행정학 공부의 어려움, 자격 등에 있어 어떤 선택이든 불이익이 없는 특강
- 이론과 실용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강의
- 2014년 9월 10일(수) 09:00~13:00
- 2014년 9월 11일(목) 09:00~13:00
- 2014년 9월 10일(수) 09:00~13:00
- 2014년 9월 11일(목) 09:00~13:00
- 2014년 9월 10일(수) 09:00~13:00
- 2014년 9월 11일(목) 09:00~13:00
- 2014년 9월 10일(수) 09:00~13:00
- 2014년 9월 11일(목) 09:00~13:00

김중규 2014 행정학 특강

2014 9/7급 대비 기본이론 강의

**얇음에 놀라지 마라
알침에 놀라라**

KASPA 02-532-5200~1
www.kaspa.co.kr

2013 서울시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3.9.7 시행)

<출제평>

언뜻 보아서는 암기형 문제보다는 이해위주의 문제들이 많고 일부 생소한 지문들 때문에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리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으며, 평년의 서울시 7급 수준을 유지한 출제였다.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과세문제(문19)와 지방직의 특성상 국가제도와 지방인사제도를 비교한 문18의 출제가 돋보이기도 했다. 다소 새로운 문제들이라면 문3의 갈등관리, 문4의 정치적 관점의 정책개념, 문7의 딜레마이론, 문11의 예산과 조세, 문19의 서울시 공동과세, 문20의 예산분류 관련 문제들이 있었으나, 암기 위주의 공부보다는 선행정학을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 행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였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19의 공동과세 문제나, 문20의 프로그램 예산분류 등의 문제는 신경향의 문제들이지만 교재와 수업에서 모두 다루었던 부분들이다.

- 김 중 규 -

01.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②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③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④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답] ⑤ ⑤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이다.

- ☑ 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 ②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낮아질 것이다.
- ③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낮아질 것이다.
- ④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 조직의 구조변수간 관계

구분	규모	기술 (일상)	환경 (불확실)
복잡성	+	-	-
공식성	+	+	-
집권성	-	+	-

☞ 2013 선행정학 p. 653 / 2014 선행정학 p. 302

02.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 ① 지방 분권화 증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 ②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
- ③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강조
- ④ 정치적 후원의 증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화에 따른 부패가능성 증대
- ⑤ 전통적 관리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간의 충돌과 갈등

[답] ①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운영의 핵심쟁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정부실체 이후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시장

기법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이 소홀해졌기 때문이다. ①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운영의 핵심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 (OECD)

- ①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 전통적 관리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 간의 충돌
- ② 재정적 압박: 효율성에 치중
- ③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 생산성과 효율성만 강조
- ④ 결정론 지향적 환경변화: 성과만을 중시하는 행정
- ⑤ 공직에 대한 위신의 저하: 공직에 대한 열망과 신뢰 저해
- ⑥ 정치적 후원 증대: 행정과 정치의 인터페이스가 증대하면서 하위직은 기업논리, 고위직은 정치논리로 분절

☞ 2013 선행정학 p. 135 / 2014 선행정학 p. 84

03.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분업구조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직급교육과 인사교류가 효과적이다.
- ② 자원의 희소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조직체치 극복을 위한 갈등조장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 ④ 개인의 특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 ⑤ 업무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부서간 접촉의 필요성을 늘려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답] ⑤ 업무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업무의 존성을 근본적으로 완화시켜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서간 접촉의 필요성을 줄여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나머지는 갈등관리에 관한 올바른 지문이다.

- ①의 직급교육이란 분야별 전문교육과는 다른 것으로 동일 직급 구성원들을 함께 교육시키는 것인데 분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 ②의 경우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갈등 예방은 자원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지만 자원이 제약되어있다면 그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의 경우도 조직체치 극복을 위한 갈등조장을 위해서는 적당한 긴장과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 ④의 경우 개인의 특성 차이로 인한 갈등은 공감대 형성과 가치관 근접을 위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 2013 선행정학 p. 513 / 2014 선행정학 p. 288

04.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개념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가치를 사실에 투사해서 얻은 행동계획
- ②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결과
- ③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활용계획
- ④ 사회문제의 정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침
- ⑤ 목표와 수단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결정

[답] ③ ③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개념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정치적 관점의 정책 개념에 해당한다 (D. Easton).

☞ 2013 선행정학 p. 276 / 2014 선행정학 p. 154

05.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론론에 따

- 르면 보수는 매우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 ② 내용이론에는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이 있다.
 - ③ 동기부여란 개인과 조직이 욕구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
 - ④ 포터(L.Porter)와 롤러(E.Lawler)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
 - ⑤ 매슬로우(A.H.Maslow)에 따르면 자기실현 욕구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다.

[답] ④ ④만 옳다. 포터(L.Porter)와 롤러(E.Lawler)는 Vroom의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여부를 중요변수로 삼아 Vroom의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

- ☑ 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론론에 따르면 보수는 위생요인이다.
- ②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은 욕구이론이다.
- ③ 동기부여란 개인과 조직이 욕구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목적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
- ⑤ 매슬로우(A.H.Maslow)에 따르면 자기실현 욕구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 동기부여이론 체계

내용이론	합리적경제인 모형	X이론, 과학적 관리론
	사회인 모형	Y이론, 인간관계론
내용이론	성장이론	인간의 성장 중심(X→Y), 고급욕구 중심, 행태론 ① Maslow의 욕구단계설, ② Murray의 명시적욕구이론, ③ Alderfer의 ERG이론, ④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⑤ McGregor의 XY이론, ⑥ Likert의 관리체제이론, ⑦ Argyris의 성숙미숙이론, ⑧ Herzberg의 2개요인이론
	복잡인 모형	욕구의 복잡성과 개인차를 고려하는 Z이론, 상황적응론 ① E.Schein의 복잡인모형, ② Hackman&Oldham의 직무특성이론, ③ Z이론:Ouchi의 Z이론
과정이론	기대이론	① Vroom의 동기기대이론, ② Porter&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③ E.Berner의 의사거래분석, ④ 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⑤ J.Atkinson의 기대모형
	형평성이론	Adams의 공정성이론
	목표설정이론	Locke의 이론
	학습이론	고전적학습이론 - 조건화이론 (Skinner의 강화이론) 현대학습이론 - 자율학습이론 (인지학습이론 등)

☞ 2013 선행정학 p. 494 / 2014 선행정학 p. 273

06.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목적은 유지하되 세부적 정책수단을 변화시키는 유형은?

- ① 정책창안
- ② 정책종결
- ③ 정책유지
- ④ 정책승계
- ⑤ 정책전환

[답] ④ 설문은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 정책변동의 유형

정책 혁신	새로운 정책의 형성
정책 승계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이나 정책의 근본적인 성격이 변경되는 것
정책 유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기구, 인력 등 정책수단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도 있음)
정책 종결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정책이 폐지되는 것

☞ 2013 선행정학 p. 431 / 2014 선행정학 p. 254

07. 딜레마(dilemma)이론에서 딜레마 상황이란, 정책결정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딜레마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정책결정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 ② 이해 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하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③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 방법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 ④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⑤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인해 문제 상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답] ② 딜레마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여과장치(예: 행정계층)를 설계하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013 선행정학 p. 638 / 2014 선행정학 p. 350

08.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②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
- ④ 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 ⑤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답] ① ①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대응성이란 관료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 ☑ ②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보다는 행정적 재량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④ 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충관계에 놓여있다.
- ⑤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 2013 선행정학 p. 109 / 2014 선행정학 p. 68

09. 합리모형에서 설명하는 합리성의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성
- ② 각 대안간의 우선 순위의 명확성
- ③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 기준의 명확성
- ④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명확성
- 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답] ③ ③은 합리모형의 의사결정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의사결정자의 만족수준에서 대안을 결정하는 것은 만족모형과 관련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합리모형의 가정이자 전제조건이다.

☞ 2013 선행정학 p. 354 / 2014 선행정학 p. 204

10. 신공공관리 이론과 뉴거버넌스 이론과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이론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 ②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비해서 뉴거버넌스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 ③ 신공공관리는 조직내부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간 문제를 다룬다.
- ④ 신공공관리는 부문간 경쟁을, 뉴거버넌스는 부문간 협력을 강조한다.
- ⑤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답] ②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는 모두 정부의 역할로서 방향잡기를 강조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 신공공관리론 vs (뉴)거버넌스

구분	신공공관리(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참여주의
관리기구(공급주체)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정치성)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Civicism)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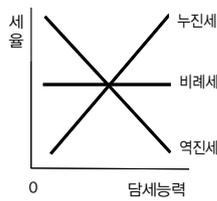
☞ 2013 선행정학 p. 222 / 2014 선행정학 p. 139

11. 예산 및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① 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금주의회계가 발생주의회계보다 유리하다.
- ②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proportional rare tax)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 ③ 이로인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⑤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답] ④ ④만 옳은 지문이다.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의 사용에 따른 대가는 국가재정법상 세입세출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총계주의(예산완전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 ☑ ① 원가절감 등 재정정보 제공은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가 더 유리하다.
- ② 조세는 담세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율이 증가일정 또는 감소하느냐에 따라 누진세·비례세·역진세로 구분한다. 소득세는 누진세, 법인세는 비례세, 간접세, 역진세의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라기보다는 단일세를 구조를 갖는데다가 소비재만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역진세적 성격을 띠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소득세 등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 ③ 이로인 외부효과(외부경제)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를 치유하여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예산의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⑤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이며, 이는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 2013 선행정학 p. 901 / 2014 선행정학 p. 480

12.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①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 ② 기획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 ③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 ④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
- ⑤ 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답] ① ①만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② PPBS의 특징이다.
 ③ 품목별예산의 특징이다.
 ④ 성과주의 예산은 점중주의 예산이므로 예산의 증가를 통제하기는 어렵다.
 ⑤ 입법부에 의한 예산통제가 곤란하다.

■ 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내부통제 합리화 (행정부 힘살어주기) · 입법부 예산심의 용이 ·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국민 이해 용이 · 장기계획 수립에 유리 · 합리적·효율적 자원배분	· 의회통제 / 재정통제 곤란 · 장기계획과의 연계보다 개별 단위사업 중심 · 대안적·합리적 검토 곤란 (합리모형X) · 점중주의 초래

☞ 2013 선행정학 p. 949 / 2014 선행정학 p. 512

13.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민참여가 보다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③ 법적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립시켜야 한다.
- ④ 자발적 조직들 간의 연계망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⑤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답] 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 요소간 수평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⑤의 경우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직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수평적 소통과 참여, 신뢰와 협력을 근간으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 즉,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 2013 선행정학 p. 46 / 2014 선행정학 p. 28

14.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사회의 모든 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중 지식정보사회가 행정조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오히려 정부관료제의 계층제적 구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 ②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보다 경직화할 필요가 있다.
- ③ 조직의 신속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④ 수평적인 형태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가 증가할

- 것이다.
- ⑤ 조직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직이론의 탄생을 강요하고 있다.
- [답] ②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가상조직이나 네트워크 조직 등 수평화된 신축적 조직이 요구되고 있다.
 ①의 경우 정보기술이 하위계층의 의사결정결과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하위계층에 대한 관료적 통제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옳은 지문이다.
 2013 선행정학 p. 570 / 2014 선행정학 p. 316

15. 라이트(D.S.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립형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간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
- ② 포함형은 정부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된다.
- ③ 포함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간 상호 의존관계이다.
- ④ 중첩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이다.
- ⑤ 분리형은 재정과 인사 등의 독립적 기능이 있다.
- [답] ⑤ ⑤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Wright는 정부간 관계모형을 분리(조정)권위형, 포괄(내포)권위형, 중첩권위형으로 구분하였다.

- ① 대립형은 Wright가 제시한 모형이 아니라 Nice가 제시한 모형이다. Wright는 분리(조정)권위형, 포괄(내포)권위형, 중첩권위형으로 구분하였다.
- ② 가장 이상적이고 실천적인 모형은 포함형(내포형)이 아니라 중첩형이다.
- ③ 포함형(내포형)이 아니라 중첩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중첩형이 아니라 포함형(내포형)에 대한 설명이다.

■ D.Wright의 정부간 관계유형

조정권위형 (Coordinate Authority Model)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이라고도 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는 인사, 재정 등 독립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포괄권위형 (Inclusive Authority Model)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수직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서 정부간 관계가 모두 수직적 예속관계이다.
중첩권위형 (Overlapping Authority Model)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시정부)가 각자 자기의 영역을 가진 독립된 실체이면서 일부 기능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이다. 가장 이상적인 실천적 모형이다.

2013 선행정학 p. 1092 / 2014 선행정학 p. 618

16. 정책결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주의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 ② 엘리트주의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지배계층의 역할에 주목한다.
- ③ 철의 삼각에서 관료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 ④ 다원주의에서는 외부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한다.
- ⑤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이슈에 따라 관료가 방관자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답] ④ 다원주의에서는 지배계층이나 관료의 역할보다는 이익집단 등 외부집단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국가론

다원주의	이익집단이 의제 주도, 국가는 수동적 심판관	신दार원론	국가가 능동적 개입
선량주의	엘리트들이 일반대중	신엘리트	무의사결정론

	지배	주의	
마르크스주의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도구 (K.Marx)	신마르크스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국가주의(베버주의)	정부관료제의 절대적 자율성 (M.Weber)	신베버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Krasner)
조합주의	국가(관료)가 이익집단 지배·억압	신조합주의	산업조직의(다국적 기업 등) 영향력 강조

■ 정책네트워크 유형별 특징

	철의 삼각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행위자	관료 + 의회상임위원+ 이익집단	광범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된 참여 (관료+전문가)
폐쇄성	폐쇄적	개방적	비교적 폐쇄적
안정성	안정적	불안정 (유동적, 일시적)	비교적 안정적 (지속적)
행위자 간관계	동맹관계	경쟁적, 갈등적 (negative-sum game)	의존적, 협력적 (positive-sum game)
정책	분야별 정책지배	정책 산출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2013 선행정학 p. 295 / 2014 선행정학 p. 169

17. 국가공무원법 제 46조에 나타나 있는 보수 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 ①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가계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문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 ③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 ④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 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답] ② ②가 가장 국가공무원법 제 46조의 보수결정 원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성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3 선행정학 p. 816 / 2014 선행정학 p. 440

18.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① 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약에 따른다.
- ②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법적 근거로 국가공

2013 지방7급 행정학기출문제 (2013.10.5 시행)

<출제평>

2013 지방7급 행정학은 예년보다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다만 중간수준의 문제가 없이 쉬운 문제는 너무 쉽고 일부 문제는 너무 어려워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문3, 문6, 문11, 문19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9급 수준의 지나치게 기본적이고 평이한 문제들이었다.

관료제의 특징을 묻은 문3의 경우 'Sine ira et studio'라는 라틴어가 등장하여 수험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①번 지문이 정답이 확실하여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Sine ira et studio'는 라틴어로 '열정과 증오 감정과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비개인화, 비정의성(impersonalism)'을 의미한다.

문6의 경우에는 함정이 있었다. 발생주의는 자산이나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것이지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발생주의를 도입할 때 논란이 되었던 현금흐름보고서를 수입 때 전해들은 수험생이라면 ④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문11의 경우 스마트정부를 유비쿼터스 정부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험생이라면 정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19의 경우 Hayes의 정책상황모형을 묻는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수험서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는 모형으로서 Hayes의 모형이나 비슷한 의사결정상황모형을 전혀 접해보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풀기 힘든 문제였다. 다행히 선행정학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Thompson의 의사결정상황모형을 응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목표(가치)와 수단(사실)이 모든 합의된 경우에는 목표수단분석을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결정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문13의 공공서비스 공급방법에 관한 문제도 참신한 문제이지만 수업 때 미리 강조를 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문17의 행정통제문제도 처음 출제된 문제이지만 백지신탁제도에 대해서 수업 때 강조를 했던 내용이라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지방7급 행정학은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조합하지 못함으로써 한 두 문제로 고득점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남는 출제라는 생각이 든다. 선행정학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최소한 90점 이상 고득점이 가능한 출제였다고 본다.

이번 지방7급 시험을 끝으로 이제 2013년도 모든 시험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올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수험생들께서는 지난 시험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패인을 차분히 분석하고 좀 더 적합한 공부방법으로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시험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 김 중 규 -

01.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 ① 관료제 모형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 ② 조직 능력보다는 개인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③ 능률성보다는 문제해결을 필수적 가치로 추구한다.
- ④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답] ② ②는 반대이다. 학습조직은 개인능력보다는 지식의 공유와 집단학습을 통한 조직능력의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 학습조직의 특징과 지향

-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에 능숙 : 문제해결능력 향상
- 창조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
- 탈관료제 지향 : 분권적·신축적·유기체적 조직
- 전략적 사고와 변화를 탐구하는 조직
- 집단학습, 팀 및 상호주관성 증시 : 협력을 통한 집단적문제해결
-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개방체제를 전제
- 표준화(규칙·절차·관행) 거부

- 환류를 통한 의사소통(비공식소통) 증시
- 시행착오(실험) 허용
- 분명한 리더십 증시 : 공유·분배된 리더십
- 기능분립적 구조의 편협함(문명) 배격

☞ 2014 선행정학개론 p. 322

02.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준운영절차나 상례적 절차를 확립하여 원활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② 부나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다.
- ③ 누진세 · 사회보장 · 사회간접자본정책 등이 그 예이다.
- ④ 정책참여자들 간 이해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답] ③ 누진세와 사회보장정책은 재분배정책이지만 SOC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정책은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비교

유형	개념	예시	재원	추진 용이 (정합 게임)
분배 정책	행정서비스의 이득·기회의 배분과 관련된 정책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공적 재원	용이 (정합 게임)
재분 배 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가진 자의 부	곤란 (영합 게임)

☞ 2014 선행정학개론 p. 156

03. 베버(M.Weber)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에서 근무하는 관료는 봉사 대상인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관료는 'Sine ira et studio'의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관료를 승진시킬 때에는 근무연한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관료라고 볼 수 없다.

[답] ① 계층제적 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상급자에 대한 계층적 책임을 강조한다.

- ② 'Sine ira et studio'는 라틴어로 열정과 증오, 감정과 편견이 없는 비개인화, 물질의성(impersonalism)을 뜻하는 말로 관료제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 2014 선행정학개론 p. 170

04.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닌 것은?

- ① 특별회계
- ② 목적세
- ③ 계속비
- ④ 수입대체경비

[답] ③ 계속비는 통일성이 아니라 한정성(시간적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통일성에 대한 예외는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등이다(압기법 : 통·목/수/특/기).

●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예외

- 공개성의 원칙 - (예외) 신임예산
- 명료성의 원칙
- 완전성의 원칙 - 빠짐없이 계산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국차관 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
- 단일성의 원칙 - 하나로 편성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 한정성의 원칙 - 질적, 양적, 기간적 한계 엄수 (예외) 예비비, 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조상충용,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 동일성의 원칙 -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연계금지 (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존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 정확성의 원칙

05. 롤스(J.Rawls)의 정의론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 원리
- ② 최대극대화의 원리
- ③ 차등의 원리
- ④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답] ② 최대극대화가 아니라 최소극대화의 원리(Maximin)라야 한다. 최소극대화의 원리란 정의의 원리에서 강조하는 의사결정원칙으로 못 가진 자에게 돌아가는 몫(적게 돌아가는 사람의 몫)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원리이다.

● 정의의 원리

제1의 원리 (동등한 자유의 원리)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의 원리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차등 조정의 원리	불평등의 시정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리 (최소극대화원리 : Maximin)

*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 조정의 원리에 우선

☞ 2014 선행정학개론 p. 74

06. 발생주의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자산·부채·수입·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회계기법이다.
- ② 미지급금·부채성충당금 등을 포함하여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 ③ 산출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 ④ 이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현금흐름보고서를 통해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채를 과소평가하는 현금주의회계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답] ① 수입·지출과 수익·비용은 다른 개념이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만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입·지출과는 관계없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수익은 물건을 판매하여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발생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발생주의는 자산·부채의 인식과 측정을 중시하지만 수입·지출을 정확히 측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발생주의는 자산과 부채의 증감 등 실질적인 거래를 정확히 인식하려는 것이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입과 지출은 현금주의에서 사용되는 말로 발생주의에서는 용어 자체가 무의미하다.

- ☑ ④ 현금흐름보고서란 정부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일정 기간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표시해주는 재무제표이다. 일반적으로 발생주의는 현금 중심이 아니므로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발생주의회계를 사용하더라도 현금흐름보고서를 작성보완할 경우 현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보고서를 발생주의회계에서 보완적으로 사용 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의 경우 현금흐름보고서가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정부의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어 있다.

● 발생주의회계의 장단점

장점	
① 투입비용에 대한 정보(원가계산, 감가상각 등의 적절한 반영)를 제공하여 업무성과의 정확한 단위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재무적 의사결정에 공헌한다.	
② 발생한 비용과 수익이 기록되므로 회계연도 말에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반영할 수 있으며 기간 간의 손익비교나 기관별 성과 비교가 가능하다.	
③ 복식부기가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자기검정기능 및 회계상 오류방지 기능이 있으므로 내부통제기능이 우수하여 공무원의 정직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시킨다.	
④ 정부서비스의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비용-편익 등 재정성과 측정을 향상시키는 도구를 제공해 준다. 최근 선진국에서 강조되는 신성과주의 예산도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⑤ 재정성과에 대한 정보공유로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다.	
⑥ 미래의 현금지출에 대한 정보나 부채의 정확한 파악으로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평가에 유용하다.	
⑦ 현금기준이 아니므로 출납폐쇄기한이 의미가 없고 불필요해진다.	
⑧ 국제적 회계표준(IMF)에 부합된다.	
단점	
① 절차가 복잡하여 작성비용이 많이 들고, 회계담당자의 주관성이 보다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② 채권의 발생시점에 수익을 기록하지만, 부실채권도 있기 때문에 수익의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채권-채무의 과대평가로 재무정보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③ 공공부문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자산가치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	
④ 현금흐름의 파악이 곤란하므로 현금흐름보고서(Cash Budget)의 보완이 필요하다.	
⑤ 이미 발생주의를 적용해 온 공기업 등의 경우를 볼 때 반드시 경영의 효율성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 2014 선행정학개론 p. 555

07.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회계 설립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앙정부 특별회계의 일례로 교육비특별회계가 있다.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특별회계 대상이다.
- ④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에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는 우편사업·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특별회계가 있다.

[답] ② 교육비특별회계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특별회계이다.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광역자치단체 특별회계이다.

☞ 2014 선행정학개론 p. 489

08.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제도주의는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 ②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종속변수일 수도 있다.

-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행위자의 선호는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holism) 입장을 취하며 주로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답] ③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행위자의 선호가 개인 간 상호작용이 아니라 개인의 전략적 계산과 판단에 의하여 주어지는 외생적(고정된) 선호라고 가정한다.

● 신제도론의 유파별 비교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	역사학적 신제도	사회학적 신제도
학문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개념	제도=개인의 합리적·전략적 선택	개별국가의 역사적 맥락, 경로의존성	사회문화 및 상징
중점	제도의 균형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도의 유사성
차원	개인	국가	사회
측면	공식	공식	비공식
범위	좁음(미시)-개체주의	중범위(거시)-전체주의	넓음(거시)-전체주의
변화	거래비용 감소	결집된 균형	동형화(Isomorphism)
선호	외생적	내생적	내생적
접근	연역적	귀납적	귀납적

☞ 2014 선행정학개론 p. 134

09.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는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 ② 일선관료들은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을 가진다.
- ③ 일선관료들은 모호하고 대립적인 기대들이 존재하는 업무 환경 때문에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④ 일선관료들의 재량권이 부족하여 업무가 지연된다.

[답] ④ 일선관료제 하에서 일선관료들은 상당부분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인적·물적 자원 및 시간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업무 지연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 2014 선행정학개론 p. 224

10. 신공공서비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주의 가치를 추구한다.
- ② 고객이 아닌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
- ③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 ④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답] ① 기업주의 가치나 기업가정신은 신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의 이념적 가치이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신공공서비스는 시민정신(citizenship)을 추가한다.

● 신공공서비스의 특징

-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
-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
- 시민에 대한 봉사 -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
- 책임의 다원성 -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 인간존중 -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
-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 서비스 중시"

☞ 2014 선행정학개론 p. 143

11. 스마트사회 및 스마트 정부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유연성·창의성·인간중심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이다.
- ②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생산성이 제고된다.
- ④ 재난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추구한다.

[답] ④ 스마트 전자정부란 진화된 IT기술과 정부서비스의 융·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하고 참여·소통할 수 있는 선진화된 유비쿼터스 정부를 의미한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사후복구 위주가 아니라 사전 예방 및 예측을 중시한다.

● 기존 전자정부와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교

	유형	기존 전자정부(~2010)	스마트 전자정부(2011~)
국민	접근방법	·PC만 가능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다매체
	서비스 방식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공공정부 개방을 통해 국민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 개발
	민원 신청 (지원금/복지 등) 수혜 방식	·개별 신청 ·동일서류도 복수제출 ·국민이 직접 자격 증명 신청	·1회 신청으로 연간 민원 일괄 처리 ·정부가 자격 요건 확인·지원
공무원	근무위치	·사무실(PC)	·위치 무관 (스마트워크센터 / 모바일오피스)
	(재난/안전 등) 일하는 방식	·사후 복구 위주	·사전 예방 및 예측

☞ 2014 선행정학개론 p. 596

12.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
- ② 주민의 감사 청구
- ③ 주민총회
- ④ 주민소송

[답]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총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례개폐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는 규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지방자치법)

제도	연도	근거법률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1999	지방자치법
주민투표제도	2004	주민투표법
주민소송제도	2006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제도	200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2014 선행정학개론 p. 588

13.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국에서는 의무경쟁입찰제도가 최고가치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 ② 사바스(E.S.Savas)의 분류에 따르면, 계약허가보조금 등은 지방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이 생산을 담당하는 공급유형에 속한다.

- ③ 니스카넨(W.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의 행태 때문에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더 커질 수 있다.
- ④ 시민공동생산 논의는 시민과 지역주민을 정규생산자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답] ④ 공동생산에서는 시민들을 정규생산자가 아니라 공동생산자 내지는 프로슈머로 규정한다. ①②③은 모두 옳다.

- ☑ ① 1988년 도입된 영국의 필수경쟁절차(CCT)는 2000년 최고가 치정책(The Best Value Policy)으로 전환되었다.
- ② 사바스(E.S.Savas)에 따르면, 계약 허가·보조금 등은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이 생산을 담당하는 유형이고, 바꾸려는 공급과 생산을 민간이 모두 담당하는 방식이다.

☞ 2014 선행정학개론 p. 574

14. 다면평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② 작업집단의 팀워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자를 행정기관 내부자에 국한한다.
- ④ 피평가자를 업무목표의 성취보다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 급급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답] ③ 우리나라 다면평가에서는 평정단을 상급자, 동료, 하급자 및 민원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 외부인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2010 이후 근무성적평정결과에는 반영하지 않고 역량개발 등에 참고만 하고 있다.

● 다면평정의 장단점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발전 : 구성원의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공정성·객관성·신뢰성 제고 : 피평가자들의 승복 ↑,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개인편차를 줄임 · 충성심의 다원화 : 특정 상관에 대한 충성을 국민중심적인 것으로 전환 · 분권화 촉진 · 민주적 리더십 발전 · 공정한 평가로 동기유발과 자기개발 촉진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과 스트레스 ·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소모 · 형평성·신뢰성·정확성 저하 우려 : 평정참여자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답합에 의한 평정 · 포괄리즘으로 인한 목표의 왜곡 : 대인관계에만 급급 · 피평가자의 무지와 이탈된 행동

☞ 2014 선행정학개론 p. 427

15. 정부실패 및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 ① 내부성 문제는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 ②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실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③ 뉴거버넌스적 접근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협력을 중시한다.
- ④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주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답] ④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할 뿐 민주주의나 책임성을 희생시킬 수 있다.

☞ 2014 선행정학개론 p. 578

16. 성과중심주의에 입각한 성과관리의 효용 또는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 ① 목표성취도에 유인기제를 연결하기 때문에 관리

대상자들이 성과목표를 매우 높게 설정하는 행동 경향을 보인다.

- ② 관료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한다.
-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압력단체들의 개입 때문에 성과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기 어렵다.
- ④ 업무수행과 성과 사이에 개입하는 변수들이 많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답] ① 성과관리는 목표성취도에 유인기제를 연결하기 때문에 관리 대상자들이 성과목표를 매우 낮게 설정하는 행동 경향을 보인다. 목표달성도를 높여서 연봉 등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달성이 용이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 2014 선행정학개론 p. 371

17. 행정윤리 및 행정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절차법 -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 ②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조직의 불법행위를 언론이나 국회 등 외부에 알린 조직구성원을 보호한다.
- ③ 옴부즈만(ombudsman) - 행정이 잘못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준다.
- ④ 백지신탁 - 4급 이상 공무원은 이해의 충돌을 막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답] ④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공무원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하는 제도이다.

☞ 2014 선행정학개론 p. 458

18. 직위분류제 분류 구조와 관련된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 ㄴ.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수준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 ㄷ.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 ㄹ.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렬의 군

	ㄱ	ㄴ	ㄷ	ㄹ
①	직위	등급	직류	직군
②	직렬	등급	직군	직류
③	직위	직급	직류	직군
④	직렬	직급	직군	직류

[답] ① ㄱ은 직위, ㄴ은 등급, ㄷ은 직류, ㄹ은 직군에 각각 해당한다.

●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직급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19. 하이예스(M.Hayes)는 정책결정 상황을 참여자들 간 목표 합의여부, 수단적 지식 합의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정책결정 상황의 분류

	목표 갈등	목표 합의
수단적 지식 갈등	I	II
수단적 지식 합의	III	IV

- ① 상황 I에서는 점증주의적 결정이 불가피하며, 점증적이지 않은 대안은 입법과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 ② 상황 II에서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모형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 ③ 상황 III에서는 수단에 대한 합의로 인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④ 상황 IV에서는 비교적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답] ③ 상황 III은 수단은 합의가 되어있지만 목표(가치)는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순수한 가치갈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영역으로 사회보장 개혁의 문제와 같이 각 대안이 초래할 재분배 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황 III에서는 사회보장 시스템 개혁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투쟁이 발생한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영역은 목표와 수단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있는 상황 IV에 해당한다. 선행정학 교재 p.216 Thompson의 모형을 응용하여 풀어도 된다.

● 정책결정 상황의 분류 (Hayes)

	목표의 갈등	목표의 합의
수단적 지식의 갈등	정상적 점증주의 영역 (I)	순수한 지식기반의 문제 (II)
수단적 지식의 합의	순수한 가치갈등의 문제 (III)	합리적 의사결정의 영역 (IV)

- (I) 목표와 수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목표수단 분석 불가 ⇒ 점증주의 전략이 불가피
- (II) 목표는 합의가 되어 있으나 수단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식이나 정보의 지속적 수집·분석이 중요 ⇒ 사이버네틱스 모형 적용
- (III) 수단은 합의가 되어 있으나 목표는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 결정이 불가능하고 가치갈등 해결이 필요 ⇒ 타협 전략이 적용
- (IV) 목표와 수단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 있으므로 목표수단 분석이 가능 ⇒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

● 의사결정 상황별 의사결정전략 (Thompson)

	목표(선호)의 갈등	목표(선호)의 합의
수단적 지식 (인과관계)의 갈등	영감전략	판단전략
수단적 지식 (인과관계)의 합의	타협(협상)전략	계산(합리)전략

20. 대표관료제 이론이 상정하는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관료제를 민주화하는 데 기여한다.
- ㄴ. 공무원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한다.
- ㄷ. 기회균등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 ㄹ. 정당의 대중화와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한다.

ㄹ.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ㄹ

[답] ② 대표관료제의 효과는 ㄱ, ㄷ, ㄹ이다.

- ㄴ. 직업공무원제
- ㄷ. 엽관주의

겨울에 더 따뜻한

2013년 각종 시험에서 100% 적중률을 자랑한

선행정학 겨울 강의일정

	기술문제연구소		기출문제연구소	
	11월강좌	12월강좌	12월강좌	1~2월강좌
대상	11월 10일 - 12월 10일 (3000~4000) + 12월 10일	11월 10일 + 12월 10일	11월 10일 + 12월 10일 + 12월 10일	11월 10일 + 12월 10일 + 12월 10일
특징	기출문제 100% 반영 + 12월 10일 12월 10일	기출문제 100% 반영 + 12월 10일 12월 10일	기출문제 100% 반영 + 12월 10일 12월 10일	기출문제 100% 반영 + 12월 10일 12월 10일
교재	2014 대비 기술문제 선정강의(9권)	2014 대비 기술문제 선정강의(9권)	2014 선정강의(9권)	2014 선정강의(9권)
학비	실강생 500명 선착순 100명	실강생 500명 선착순 100명	실강생 500명 선착순 100명	실강생 500명 선착순 100명
장소	이그랜드	콘나기	콘나기	콘나기

2014 대비

기술문제 선행정학 10.25 대출간

서울9급/7급, 교행9급, 국회9급, 지방7급까지 분석반영

- 교행9급 기술문제는 카스파 독점 복원보관중인 문제 -

• 매문제마다 중요도/출제빈도/일기법/항정리/항기/문제유형/대답순수 등 다양한 tip 표기

021532-5280~1
www.kaspa.co.kr

1588-2976
www.amoxam.com

23

2013년도 7급 기출문제 모음

지 은 이 | 김중규
펴 낸 이 | 김중규
펴 낸 곳 | 도서출판 에드민

경영총괄 | 이수영
편 집 | 최윤희
임프린트 | (주)소문사 (대표 박성규)
마 케 팅 | 윤영섭·정민규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76-9
출판신고번호 | 제22-2964호
홈페이지 | <http://kaspaco.kr>
동영상 강의 | <http://kaspaco.kr>
이 메 일 | kaspaco@hanmail.net
블 로 그 | <http://blog.naver.com/delorean1985>
전 화 | 편집문의 : 02-532-5280~1
영업문의 : 02-532-5314
팩 스 | 02-532-5315

.....

이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